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239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18일

발 의 자 : 방미숙 의원

1. 제안이유

- 하남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다. 지급대상 및 지급주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마.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바.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 발체서 : 덧붙임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제2조

5. 예산수반 사항 : 연간 약15억원 소요(도비:50%, 시비:50%)

6.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년 5월 18일 ~ 5월 26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7.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① 농민기본소득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 ① 농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에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제8조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하는 자

2. 하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3. 하남시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농민기본소득 동 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

2.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제7조(지급주기 및 지급액) 농민기본소득 지급 금액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분기 및 반기 등으로 지급한다.

제8조(농민기본소득 위원회) 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과 시 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에는 농민기본소득 동 위원회(이하 “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 에는 농민기본소득 시 위원회(이하 “시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9조(동 위원회) ① 동 위원회는 농민,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및 동장 등 7인 내외로 구성하며, 동의 농민수가 적거나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동 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사를 실시한다.

③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시 위원회(동장을 포함한다)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④ 시장은 동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 위원회) ①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민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 및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하남시 의회에서 추천한 자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

② 위원 중 공무원 및 하남시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시 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등을 담당한다.

⑤ 동 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하남시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동 위원회, 시 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 위원회 및 동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민기본소득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신청) 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농민기본소득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간 협력)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동 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동 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농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반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기도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민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시·군의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①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시·군의 사정에 따라 그 지급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민기본소득 지원의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시·군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직전 연도의 농민기본소득 지원 평가(성 형평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다음 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계획
6. 농민기본소득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민기본소득지원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시·군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등) ① 도지사는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시·군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 농민기본소득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재정지원 대상 시·군과 시군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민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 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③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민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농민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농민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농민의 농민기본소득 신청과 지급대상자의 심사·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민기본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농민기본소득위원회) ①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자의 추천·심사·현장조사 및 마을공동체 규약 실천 등 농민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군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읍·면·동 농민기본소득위원회,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읍·면·동 단위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지급 신청서의 전산입력, 현장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두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농민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하남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하남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제9조제2호에 따라 지역화폐를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판매·환전 업무, 전자지역화폐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